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 가 공 무 원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장애인·이공계 전공자·저소득층 외에 다자녀 양육자도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20헌마1181, 2020헌마1605) 및 단순위헌 결정(2020헌가8)에 따라 관련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 시스템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입법 미비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(안 제26조)

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애인·이공계 전공자·저소득층 등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, 채용·승진·전보 등에서 우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

나. 실·국장급 임기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다양화(안 제28조의4)

실·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사회에 유연한 채용 시스템을 확립하고 각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

- 다.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(안 제33조제6의4호)
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(2020헌마1181, 2020헌마1605)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정비함
- 라.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(안 제43조제4항)
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
- 마.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정비(안 제75조제2항)
처분권자 외에 처분제청권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
- 바.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제공 근거 명시(안 제83조제4항)
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단서 중 “장애인·이공계전공자·저소득층”을 “장애인·이공계 전공자·저소득층·다자녀 양육자”로 한다.

제28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33조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파면·해임되거”를 “파면·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”로, “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)”를 “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,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.) 집행유예”로, “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”를 “유예기간이 끝난 날(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)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4항 본문 중 “6개월”을 “6개월(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)”로 한다.

제69조제1호 본문 중 “제33조 각 호의”를 “제3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”으로 한다.

제71조제2항제4호 중 “만 8세”를 “8세”로 한다.

제75조제2항 중 “처분권자”를 “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”로 한다.

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 및 제83조

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휴직·과건 등의 결원 보충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4조(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단 직위를 포함하며, 실장·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)
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)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② ~ ④ (생략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~ 6의3. (생략)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
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
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
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
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· 나.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결격사유) -----

-----.

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

6의4. -----

----- 파면·해임처분을
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
아니하거----- 선고
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
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를 포함하며, 벌금형을 선고받
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
날을 말한다.) 집행유예---
유예기간이 끝난 날(집행이
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)부터 2
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	4. 8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75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	제75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처분권자</u> 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	② <u>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83조(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)	제83조(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)

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5